

“北, 북미대화 반대하는 50~70명 재산몰수”

WSJ 탈북민단체 보고서 인용 보도...“김정은, 정적 투옥·처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향한 자신의 외교적 접근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적들을 추방하거나 투옥, 또는 처형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탈북민 단체인 ‘북한전략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북한의 부유한 엘리트층 50~70명을 숙청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고 전했다.

이런 보도는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

일 앞둔 가운데 나왔다.

북한전략센터는 전·현직 북한 고위 관리 20명을 인터뷰해 이번 숙청 작업이 불법으로 부를 쌓은 고위직 간부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 등에 따르면 작년 말 시작된 숙청 작업은 북한 기독교인이 모은 외화 몰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백만 달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부패 슬로건을 내건 이 작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하에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김정은 정권의 재정을 강화하

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미 안보 전문가들과 한국의 전직 정보 관리들이 WSJ에 전했다.

대북 제재로 수출이나 국제 금융망 접근이 막히면서 전통적인 외화 획득이 어렵게 되자 숙청 후 자산 몰수로 필요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실장은 “이번 숙청에서 많은 경우는 돈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숙청에는 김 위원장의 선전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손을 대지 못했던 북한 후위사령부가 포함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후위사령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말 수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숙청됐다는 것이다. 후위사령부의 비리가 적발된 후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북한전략센터는 2011년 김 위원장 집권 후 모두 400여명이 숙청됐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숙청 작업이 북한의 정치적 위기를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면서 김 위원장의 장악력이 여전히 단단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북 제재의 여파로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이 외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이들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日 여당의원들 또 독도 도발

한국 조사선 항행 비난

일본의 여당 의원들이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최근 독도 주변을 항행한 것에 “강렬한 분노”라는 도발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나섰다.

20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당 본부에서 외교부회(외교위원회) 등 관계 부회들의 합동 회의를 열고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항행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냈다. 자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후 야마다 겐지 외무장관에게 제출한 결의문에서 “강렬한 분노를 갖고 비난한다”며 “한국은 이미 국가로서 신뢰를 잃

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문화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요구’도 거론하며 “무수한 국제약속 위반, 허언, 무례를 반복하고 있어 단호히 항의한다”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을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해양조사선이 최근 독도 주변을 항행했다며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조사선의 항행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만약 조사 활동을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일본)의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 5년간 방위장비 구매 지출 상한 철폐

언론 보도, 미국산 최신에 무기 구입으로 예산 증가

일본 정부가 2019 회계연도부터 5년간 방위장비 관련 비용에 대해 기존에 설정한 지출 상한을 철폐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전했다.

이는 미국산 최신에 장비 구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 상한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2023 회계연도의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장비 관련비를 포함한 방위비 총액의 상한 설정을 처음으로 보류했다.

일본은 1986년 이후 계획에 따라 방위장비를 취득한다며 원칙적으로 5년마다 이러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방위비 총액을 결정해 왔다.

그동안 방위비 총액에 대해 ‘한도’, ‘틀’이라는 표현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연도별 예산을 계획의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

현재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총액에 대해 “5년간 23조9000억엔(약

242조원) 정도의 ‘틀 안’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마련한 차기 정비계획에는 방위비 총액에 대해 “25조5000억엔(258조)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처음으로 상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목표’라는 표현은 예산 편성 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위장비 지출 상한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신문에 설명했다.

신문은 “상한이 철폐되는 것은 방위비 총액을 25조5000억엔 이내로 한다고 전망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산 방위장비를 구매할 때 대외군사판매(FMS)와 관련된 경비가 그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방위계획에서는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2기와 최신에 F-35 전투기 45대의 도입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생산인구 감소... 中지방정부 ‘인재 쟁탈전’

주택·생활보조금 등 혜택

인재 이탈과 생산인구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20일 보도했다.

명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거주자 격 완화, 주택 구매 혜택, 생활보조금 지급 등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중국 내 지방정부는 16곳에 달한다.

중국 선전시는 즉시 후커우(호적)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인재 유치가 나섰다.

중국에서 사회복지, 의무교육, 대입

응시, 차량 등록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후커우를 취득해야 한다. 대도시에서 후커우를 취득하기는 여간 까다롭지 않아 지방 정부들은 이를 인재 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중국 지방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인재 유치가 나선 것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로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는 우려와 함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을 저하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중국의 15~60세 생산연령인구는 매년 1000만 명씩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전망지수 9년만에 최악 무역 성장세 급격히 둔화” WTO 올 1분기 전망

글로벌 무역의 성장세가 단기적으로 급격히 꺾일 것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진단했다.

WTO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1분기 세계무역전망지수(WTOI)는 96.3으로 201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WTOI는 세계무역의 전망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점인 100보다 낮을수록 성장세가 약하고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다.

세계무역의 7개 동력으로 구성된 지수 세부항목을 보면 상품 무역량(101.9)만 더 낙관적인 동태를 나타냈다.

컨테이너 항구 처리량은 100.3으로 기점을 상회했으나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자제품 부품은 88.7로 가장 부진했고 자동차 생산·판매(92.5), 농산물 원자재(94.3), 수출주분량(95.3), 국제항공 화물량(96.8)이 그 뒤를 이었다.

추세보다 뒤떨어진 이들 세부항목의 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과 비슷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TO는 “다가오는 몇 달 사이에 세계무역의 흐름이 지수에 나타난 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더 광범위한 경제성장 둔화를 피하기 위해 글로벌 통상의 긴장 수위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파리 ‘反유대주의 이제 그만’ 시위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의 ‘반(反)유대주의’ 시위자들 머리 위로 불어로 ‘이제 그만’이라고 쓰인 해시태그가 들려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비상사태 소송 제기한 16개주는 극좌가 이끄는 주”

장벽 드라이브에 걸림돌 관측

트럼프 “소송서 이길 것” 낙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6개 주(州)가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극좌에 의한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 ‘열린 국경’ 민주당과 극좌파가 이끄는 16개 주가 제9 연방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6개 도시’라고 잘못 표기했다가 한 시간 뒤에 ‘주’로 바로잡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그는 특히 캘리포니아에 대해 “완공될 희망이 없는 고속철도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며 “비용 초과가 가히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실패한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장벽보다 수백 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제리 브라운 주지사 시절부터 캘리포니아주와 “양국 관계로, 사사건건 충돌을 빚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윗을 통해서도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을 ‘녹색 재앙’이라고 비난하며 “캘리포니아가 수십억 달러를 낭비한 뒤 대규모 ‘총알 열차’ 사업을 취소해야만 하게 됐다. 그들은 연방 정부에 35억 달러를 빚졌다. 그 돈을 당장 갚기를 바란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개인 뉴스 주지사(민주당)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가짜뉴스’로 칭하며

“고속철도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16개주 법무장관들은 전날 의회 허가 없이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 연방 50개주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뭉쳐서 반기를 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드라이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전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이다. /연합뉴스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급매8억(대출3억5천만원 포함)
- 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